

한미일 정상회담... 여야 반응 엇갈려

與 “공고한 협력” · 野 “국익 도움되나”

국힘 “공고한 협력체계 구축... 성과로 꼭 차”

민주 “일본과 ‘준군사동맹’ 설명을... 부담 우려”

여야가 지난 19일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한미일 3국이 공고한 협력력을 다졌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과 준군사동맹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안보공동체 참여로 늘어날 부담을 우려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일 3국 정상은 현대 외교사의 상징적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첫 단독 정상회담을 가지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간 협의에 의한 공약이라는 채택 문서의 명칭에서 보듯 3국이 그동안 지켜온 공동 가치와 규범, 현재 시급한 실질적 대안과 함께 앞으로의 공동 비전까지 모두 녹여낸 외교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군사안보, 경제, 첨단기술과 국제외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빠짐 없이 촘촘하고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한미일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위협에 대해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하기로 한 점은 3국의 국가안위가 서로 때려야 할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권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명절 한미동맹을 놔두고 일본과 ‘준군사동맹’을 맺는

것이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되느냐라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번 한미일 정상 회담에서 3국 정상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다. 해당 공약은 한미일 유사시 협의 의무 서약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위기 발생 시 3국 간 협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사실상 ‘준군사동맹’의 수준으로 일본을 포함한 3국 안보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게 물었다. 이번 ‘준군사동맹’으로 얻은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두고도 일본의 군사동맹은 왜 필요한 것인가”라며 “게다가 일본을 끌어들이어 안보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한반도 위기가 긴박하다면 사전에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준군사동맹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오히려 안보공동체 참여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심지어 일본 위기 발생 시 우리나라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 등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 과정에서 기사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욱 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력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귀를 의심케했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의 군사적 어려움에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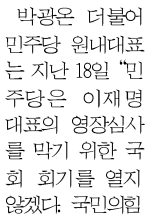
그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익구조는 다르다”며 “그런데도 이번 3자협약에 대한 공약은 미국의 국익을 우리 것처럼 일치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번 유사시 협의 의무로 어떤 이익을 챙겼는지 국민께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이재명 영장심사 막는 국회 회기 열지 않을 것”

민주 박광은 원내대표

“방통위, 무법적 폭거 자행 방송법 개정... 제어 방안 강구”



박광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어제 4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대선이 끝난 지 1년 반이 다 되도록 대선 경쟁자를 상대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는 이 상황을 이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거듭 촉구한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수사를 조속히 매듭짓기 바란다”며 “국민 통합과 정치 복원, 민생경제 회복에 여야가 힘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재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절차가 정당하고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공영방송 이사장과 미디어기부관장을 해임한 것에 대해 “기형적 방통위가 국민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역사의 심판에 대한 겁도 없이 무법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장과 미디어기부관장을 마음대로 해임하는 반민주적 결정을 하나하나 남김없이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폭력적으로 우리나라 방송 전 반을 권력 하부구조로 만들어 국민이 아닌 누구를 이롭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행 방송법으로는 방송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게 더욱 분명해졌다”며 “민주당은 방송법을 개정하고 해임조치에 대한 효력적 가치분 신청을 하는 등 방통위의 불법과 탈법, 무법적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이동관 방통위장 후보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지난 18일 이동관 방통위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 청문회를 종료했다.

이날 과방위 회의는 자정을 10여분 앞둔 오후 11시48분께 산회했다.

여야 간시는 주말 동안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를 위한 회의 일정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정부 제출 기한은 21일로 현재로서는 전체 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한 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 제출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겸임 당시 언론 장악을 주도했다며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자녀 학교 폭력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학교에 위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시회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각종 의혹은 정치 공세일 뿐이며 이 후보자는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정상화할 책임자로 자질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맞섰다.

여야 입장 차이가 커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김영호 통일부 장관 사퇴처럼 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이낙연 “통합의 지도자 절실”

(전 국무총리)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 참석

“민주주의 · 남북평화 · 국민통합 다시 세워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김대중 대통령이 이룩했던 민주주의, 남북 평화, 주변 4강 국가와의 관계가 위태롭고 흔들리고 있어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울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신안군 하의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여 · 야 정당이 극단으로 치달고 정권이 바뀌면 모든 정책이 뒤집어 지는, 국가 기관까지 털어내는 협박한 시대, 통합의 지도자가 절실한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위대함은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혼란과 불안에 비춰보면 적어도 세가지는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한다”며 한반도 주변 긴장관계 완화의 평화 추구, IT산업을 키워낸 미래지향적인 해안,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삶의 일부로 김 전 대통령을 느끼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우리 세대의 큰 숙제”라며 “축복 대신에 의무도 있다. 당신이 이루지 못했거나 이루었으나 오늘 다시 흔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전남 신안군 하의면 농민운동기념관을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리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추도식에 앞서 하의도 농민운동기념관을 방문해 둘러봤다. 방명록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 신념으로 영근 하의농민운동 그 가 열한 역사를 기억합니다”라고 썼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목포에서 전남도지사 시절 인연을 맺은 전남도청 간부들과 식사를 했다. /뉴시스

민주 “정부여당, 오염수 조기 방류 요청 의혹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日 아사히신문 보도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을 고려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조기 방류를 비공식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측에 핵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적당히 뜬구름 잡는 식으로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어제 박근혜 국무조정실 국무차장은 일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조기 방류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를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아사히신문의 기사 원문은 요청의 주체를 분명 정권과 여당 내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는 여당의 요청 여부를 모르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 차장은 ‘정기권 부분은 굳이 언급을 안 했다’고 답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무엇 하나 제대로 점검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법이 없다”며 “도대체 ‘조기 방류 요청’ 여부에 대해 정권의 어느 범위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인가. 박 차장의 설명대로라면 여당은 여당대로 이에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권과 여당 내 라고 밝힌 아사히신문 보도를 정면 반박하려면 대통령실과 행정부, 국민의 힘까지 모두 확인해야 한다”며 “민약 전체를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면, 아사히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보도는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주변국과 심각한 갈등의 소지가 돼 대한민국의 국익에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연주시민을 위한 화랑 콘서트

심미정 피아니스트
안인수 베이스 피리톤

Heinrich Heine | R. Schumann | G. Caccini | F. Fatti | J. Brahms | S. Sondheim | Ennio Morricone | 윤막준

2023. 8. 25(금) 7:30pm 문화공간 이룸 ART SPACE

티켓 | 전석 4만원
할인 | 조기예매 50% 할인
12월 15일 단체예매 50% 할인

문의 | (세이브) 연주시민을 위한 다다락 콘서트 검색
문의 | 카카오톡 '문화공간이룸' 0631223-5323